

2005년 국감 DC 관련 핫 이슈 쏟아져

국회는 과기정위·법사·정무·재경·건교 등 14개 상임위별로 지난달 22일부터까지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번 국감에서는 휴대전화 도·감청 문제, 단말기보조금 허용 여부, KT 민영화에 대한 평가 등 디지털콘텐츠 관련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부각됐다.

글 권경희 기자

2005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 디지털콘텐츠 관련부처가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다. 올해는 특히 인터넷·게임·음악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현안과 맞물린 쟁점들과 함께 문화콘텐츠комп렉스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이 주요 질의 안건으로 떠올라 주목을 받았다.

이와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도·감청 사태와 관련, 전임 국정원장과 정통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립각을 보이면서 올해 국감에서는 정보통신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가열되고 있다.

과기정위, 다양한 이슈 국감질의 나와

과기정위는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달 22일 과학기술부 국감을 시작으로 지난달 23일 정통부 국감을 벌인 뒤 이달 11일까지 한국전산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정통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감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는 여야가 증인 채택 안건부터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도·감청 사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감청 당시 국정원장과 정통부 장관을 지낸 일부 인사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도·감청 사태는 올해 정

기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과기정위 국감에서는 그동안 이동전화도·감청 기술에 대한 쟁점사안을 국정감사 초반부터 도마 위에 올렸다. 또한 WCDMA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도청 방지대책을 비롯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문제 등도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달 6일로 예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대한 국감에서는 도·감청 장비 개발에 얽힌 의문들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위 국감에서는 단말기보조금 허용 여부 등 유흥경쟁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이동시장 경쟁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안을 놓고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이 다채로운 의견과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해 주목됐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과기정위 의원들이 내년 3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보조금 금지 법안의 시한 연장에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 지도 이번 과기정위의 주요 이슈중 가운데 하나다.

또한 올해 국감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요금 인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CID(발신자확인)·SMS(단문메시지서비스)

등 이통사 부가서비스 요금도 쟁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부가서비스를 통해 이통사들이 과도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점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CID 무료화 및 SMS 기본료 포함 등 부가서비스 요금인하에 대한 주장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통신분야에서는 KT 민영화에 대한 평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최근 'KT 민영화 3년, 평가와 과제'라는 정책 자료집을 통해 KT민영화를 실패작으로 규정, '특별주'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KT 독점력 해소 및 통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들이 이번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인터넷실명제·KT PCS 재판매·외국인지분률 철폐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통사 보조금 2년간 최대3조8,000억

이미 국정감사가 열린 이슈 중에는 이동통신업계가 가입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지급한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 최대 3조 8,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국회 과기정위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지난달 23일 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체

적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해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에는 최소 1조1,000억원, 최대 2조2,000억원이 나왔고, 올 8월까지의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6,000억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각 이동사들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적발 금액과 연간 신규 가입자수를 곱한 것으로 최대치는 적발된 금액을 모두 적용한 것이고 최소 금액은 적발 금액중 이동사가 아닌 제조업체의 보조금과 적발 당시 보조금 규모가 가장 많을 때라는 점을 감안해 50%만 적용한 수치다.

김 의원은 특히 최대 금액을 적용하면, 지난해 3,800만 가입자에 1인당 5만 8,000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소값을 적용하더라도 2만9,000원 가량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1조9,000억원의 불법 보조금을 제외한 원가보상률은 SK텔레콤이 116.5%에서 122.4%로, KTF는 102.8%에서 113.0%, LG텔레콤은 99.1%에서 114.0%로 상승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정통부에서 제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자료의 경우, 2004년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9,35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실명제보다 자율규제를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국회 과기정위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실명제보다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고 이미 지난해에 관련 소프트웨어 2종이 보급돼 있다고 설명했다.

진영 의원은 정통부 산하 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에 '인터넷게시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신원확인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가 익명인증서를 발급받아 게시판에 로그인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사용자 추적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실명제 도입보다는 자율규제와 홍보 강화를 더 주문했다.

한편 진 의원은 국내 휴대전화 핵심부품 47개 품목 중 18개 품목이 국산화율이 0%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중소 IT부품 업체 육성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신감청 전과정 전산화해야

통신감청의 모든 과정을 국가 행정망을 이용한 전산 과정으로 구축해 불법적인 감청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이와 관련한 법제화 작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국회 과기정위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문서의 송수신 형태로 돼 있고 사후 확인작업을 위해선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야 하는 통신감청 과정을 전면 전산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통신비밀보호지원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는 국가 행정망을 통해 만들면 당장이라도 구축이 가능하고

고 말했다.

진 의원은 기존의 상당수 실명제 도입 사이트에서도 사이버 폭력 문제가 적잖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시 자칫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이버 복제인간' 출현 우려도 높은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기보다는 이 같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 같은 시스템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사후적으로 통신감청 검증 업무를 이행하는 새로운 관리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통신비밀

보호지원시스템'과 '관리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금거래 제재’ 입법논란

도토리·아바타 등 사이버 자산의 현금 거래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 양성화 입법과 동시에 도토리·아바타 등 사이버자산의 현금 거래 시장도 투명화, 건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원 측은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 주장과 별도로 사이버 자

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의 한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의 경우 거래 규모가 상당하고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할지라도 도토리는 결재 과정이 투명하고 사이트 안에서만 거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의문시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에서 도토리의 현금화 시도가 있었지만 곧바로 적발했으며 이제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인터넷업체 관계자도 “아바타는 현금거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업체별로 미성년자가 구입 가능한 자산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다소 세태에 뒤떨어지는

기업들은 50점도 안되는 낙제점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지난달 22일 문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콘텐츠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문광부 게임산업정책에 대한 기업수요자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점 만점에 4.65점의 저조한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문광부의 게임산업 순기능 장려정책은 5점 만점 가운데 2.03의 평가를 받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정책도 2.63에 머물렀다.

특히 게임업체가 해외에서 겪고 있는 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도·감청 사태와 관련, 전임 국정원장과 정통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립각을 보이면서 올해 국감에서는 정보통신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가열되고 있다.

산에 대한 규제 입법 추진을 밝힌 것.

정의원 측은 미성년자의 도토리·아바타 등 사이버 자산의 거래가 위험수위를 넘었기 때문에 아예 구매나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실상 업계에서는 도토리·아바타 등 사이버 자산의 현금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의원 측은 “업체들이 부인한다고 해도 사이버자산의 현금거래 시장은 분명히 실재한다”고 전제한 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도입까지는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전단계로 규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의원은 국감 이후 10월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 후 11월경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회원수 1,500만명을 돌파한 커뮤니티사이트 싸

주장”이라고 했다. 실제 싸이월드 도토리는 한달에 최대 6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원 측은 “아무리 금액 제한규정을 뒤도 결국 업체별로 모으면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나기 마련”이라며 “단순히 금액 제한에 머물 것이 아니라 거래시 동의를 확실히 구하도록 하는 2중, 3중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어서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문광부 게임산업 정책 점수는 낙제점

문광부 국정감사는 아이템 현금거래 등 인터넷·게임 분야의 현안과 맞물린 쟁점,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조성사업 부실 문제 등이 벌써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광부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에 대해 관련

에 대한 문광부의 대처능력은 2.06점을 받는데 그쳤고 저작권 분쟁 대처 능력도 5점 만점에 2.17을 받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문화콘텐츠 진흥원 민간기구화 되나

8월 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대신할 민간 자율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민간기구화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만화·애니메이션·음악 관련업계에서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이 그동안 업계가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으며 진흥원의 민간기구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반면, 주무부처인 문광부는 기반 여건 미비로 진흥원의 민간기구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맞서고 있다. ●